

환경경영 시범인증제 실시

기업의 환경 친화적 경영상태를 감사하고 인증해주는 환경경영인증제도가 3월부터 시험 운영된다.

공업진흥청은 내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실시될 국제표준화기구(ISO 14000) 인증제도에 앞서 제도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국내기업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환경경영 시범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영 시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뿐이다.

공진청이 마련한 환경경영 시범인증제도 실시계획에 따르면 2월중 환경경영체제 구축능력과 의지가 있는 시범대상 모델기업 30개사(대기업 25, 중소기업 5)를 선정, 환경경영 국가산업표준인 KS/ISO 14001 규격(안)에 의해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한 뒤 우수기업에는 「환경경영시범기업」으로 인증해 줄 방침이다.

환경경영 시범기업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내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ISO 14000 인증시 차이점만 보완토록 해 공식인증서를 발급하고 정부가 해당기업의 환경 건전성을 홍보해 주는 혜택도 받는다.

공진청은 시범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환경경영 인증기관 및 심사원 양성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 및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후보기관을 지정, 이기간중 기업 환경심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시범인증 계획기간 중 50명 이상의 환경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환경심사원 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사팀을 편성, 사전 워크숍을 거쳐 외국전문가와 함께 현장심사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하수슬릿지, 비료로 유용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무·배추 등 농작물의 비료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농촌지도소는 지난해 9월부터 작년말까지 제주시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릿지를 이용해 시범포에서 무와 배추를 시험재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환경관리인. 1995. 3

분석결과 10a당 2천kg의 하수슬릿지를 퇴비로 뿌려준 시험포에서 수확한 무는 평균 ▲길이 37.7cm ▲지름 4.1cm ▲무게 1백87kg으로 이를 사용치않은 일반수확 무 평균 크기인 ▲길이 8.8cm ▲둘레 3.73cm ▲무게 1백32.3kg에 비해 훨씬 크게 자랐다.

또한 현재 재배중인 배추도 평균 떡잎길이가 31.6cm, 잎수는 17.3개로 일반재배한 배추의 떡잎길이 24.7cm, 잎수 14.9cm에 비해 크게 자랐다.

특히 시험포에서 재배한 무의 잎과 뿌리, 배추 등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오염 여부를 조사했으나 전혀 검출되지 않아 하수슬릿지가 농작물의 퇴비로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지도소 관계자는 “하수슬릿지에는 일반퇴비보다 오히려 유기물과 질소, 칼슘 등 농작물에 필요한 성분이 많아 농작물의 성장에 좋은 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좀 더 시험을 거친 뒤 일반농가에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장에 빗물처리장 설치

(주)유공이 국내 최초로 사업장안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오염물질을 처리한 뒤 다시 활용하기 위해 우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다.

유공은 공장건물 외부 지역에 떨어진 연간 약 8백만t의 빗물이 기름성분과 섞여 배수로 빠져나가 울산 앞 바다를 오염시킨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1백5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빗물처리장 시설공사를 착공했다.

이 빗물처리장은 사내 20군데에 설치된 집수정에 모인 빗물을 5만6천t 규모의 물탱크로 옮겨 BOD와 COD를 측정해 오염물질을 고도처리한 뒤 공업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유공은 빗물의 오염 농도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공장폐수처리 기준인 BOD, COD 1백ppm 이하를 훨씬 강화한 10ppm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공측은 “회사의 특성상 작업장에서 누출된 기름과 빗물이 뒤섞여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어 법규정도 없는 빗물 처리장을 자진해 건설하고 있는데 마침 장기 가뭄대책으로도 큰 효과가 기대되는 등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청와대 업무보고

정부는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는 수질 오염물질로 황해 오염이 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중 일부를 중국에 차관으로 제공, 폐하수처리장 등의 건설을 지원키로 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지난 2월 8일 환경현안에 대한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오폐수의 유입에 따른 황해 오염과 산성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등 양국 간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모두 27개 지점에 대한 황해오염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산, 태안반도 등 3개소에 산성비와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측정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중국에 대외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오는 9월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4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에서 황해오염 및 산성비 문제를 양국간 환경 현안으로 공식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에 앞서 오는 4월 중국 환경청장을 초청, 양국 환경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며 이와 아울러 양국 고위실무자들의 교환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따른 절수의 생활화추진과 관련, 환경부는 누진폭을 확대한 수도요금체계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하고 ‘수돗물 및 폐수 10% 줄이기 운동’ 등 범국민적인 절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어 고흥, 신안, 영광, 남해 등 식수난이 극심한 영호남지역에 대해서는 식수를 운반해서라도 비상급수를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방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군선박, 군용차량, 소방차량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종량제와 관련,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재활용품처리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장비, 집하선별장 확충을 위해 4백24억원, 재활용

업체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 용자를 위한 2백억원 등 모두 6백24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보고했다.

환경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1개월만에 감량률은 37%, 재활용품 증가율은 41%로 집계돼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처리비용절감 4천63억원, 재활용품 가치 1천4백9억원 등 연간 5천4백7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세계화 과제 확정

환경부는 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산업을 적극 지원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환경분야 세계화 추진 기본방향 및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된 환경 세계화 추진과제는 ▲ 환경기술의 일류화 및 환경산업의 육성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공동체의 건설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의식의 선진화 등 모두 4개다.

환경부는 특히 환경산업은 세계 시장규모가 오는 2000년에 약 6천억달러로 급성장하고 환경기술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국내기업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 국내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 환경기술 연구개발자금 확보 ▲ 환경관련 기술인력의 원활한 양성 ▲ 환경기술 수요촉진책 마련 ▲ 연구개발시설의 확충 등 환경기술 진흥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실용가능한 기술을 관련업계에 신속히 보급·전파 하는 등 환경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제도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시장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94배출업소 단속 실적 평가

환경부는 '94년도 전국 각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95.2.24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94년도에는 연인원 230,355명을 투입, 182,228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6.4%에 상당하는 11,75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의법조치하였는 바, 그 결과를 '93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도·점검대상업소수가 51,688개소에서 58,207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단속건수도 130,091건에서 182,228건으로 40.1% 증가한 반면

○위반건수는 12,965건에서 11,752건으로 9.4% 줄었고, 위반율도 10.0%에서 6.4%로 감소하였으나

○배출부과금 부과액이 128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으로 적발한 건수가 613건에서 714건으로 적발율이 16.5% 증가 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94.1월 신정연휴기간에 발생한 낙동강 수돗물 악취 발생사고를 교훈 삼아 설날·현충일·추석연휴 등 취약시기와 배출업소 관리업무 이관('94.5.4)에 따른 과도기에 특별감시를 추진하여 수질 오염사고 재발방지에 주력하였을 뿐 아니라, 극심한 가뭄현상에 따라 사법권을 가진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94.11.1~'95.1.25까지 총 1,388건을 입건하여 68명을 구속, 1,320명을 불구속 처리하는 등 단속 활동의 내실화를 기한 한해였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평가에서 강력한 단속에도 아직도 불법방류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오염도가 상승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기업의 환경윤리의식전환 유도가 좀더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감시체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95.2.22 시·도 및 환경관리청 지도·단속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는 한편 감시체제 개선방안도 검토하여 배출업소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94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환경관리인. 1995. 3

□ 배출업소 관리강화

1) 배출업소 단속권한 이관('94.5.4)에 따른 과도기 합동단속 실시

○이관 전·후('94.3.21~5.31) 합동단속

• 31,201개소 단속, 2,048개 위반업소 적발(6.6%)

설날·현충일·추석·신정연휴기간 사고대비 특별 단속 실시

○37,150개업소를 단속, 129개 위반업소 적발(0.3%)

2) 설날·현충일·추석·신정연휴기간 사고대비 특별단속 실시

• 현충일('94.6.4~6.7) : 4,829개소 단속, 13개 위반업소 적발(0.3%)

• 추석('94.9.6~9.26) : 12,641개소 단속, 33개 위반업소 적발(0.3%)

• 신정('94.12.29~'95.1.5) : 8,903개소 단속, 20개소 위반업소 적발(0.2%)

3) 중점관리지역 및 문제업소 전담관리체제 구축

○공장밀집 135, 상수원상류 25, 오염우심 35, 기타 32 등 227개 중점관리 지역에 직원 898명 전담제 실시
갈수기 배출업소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기간 : '94.11.1~'95.5.31

○'94.11.1~'95.1.25까지 총 1,388건을 입건하여 68명을 구속, 1,320명을 불구속 처리

□ 제도개선 사항

1) 폐수재이용유도로 배출량 감소

○사업장 종별 분류기준 개선을 통해 폐수재이용 유도

• 시설용량(발생량)→폐수배출량(방류량)

○폐수재이용시 유량계 설치면제('94.8.11 고시개정)

2) 배출부과금제도의 총량적 규제방식 도입·추진(법령 개정 중)

○배출허용기준 이행확보 수단에서 오염저감의 자율 유도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전환

• 부과기준 :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 부과대상 : 폐수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농축산물 단순가공시설 등 일부시설 행정규제완화

- 허가대상→신고대상
-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 3종 사업장의 경우 환경기사 2급→3년 이상 동일 분야 종사자도 가능
- 무허가업소·상습위반업소 납품거부 및 불매운동 전개
- 위반업소명단 민간단체 불매운동 실무협의회에 제공('93. 11. 24)
- 매일 보도자료로 제공된 '92. 1~'93. 9까지 3종 이상 위반업소 명단
- 민간단체의 간담회에 11회 참관
- 환경문제에 대하여 민간단체·정부·기업의 유기적 관계를 갖고 공동참여
- 폐수 10% 줄이기 추진
- 1) 추진기간 : '95. 1. 1~'97. 12. 31(3년)
- 2) 추진목표 : '97년까지 '94년도 오염부하량의 30% 삭감
- 방류량·농도 : 매년 5% 삭감
- 부하량 : 매년 10% 삭감
- 3) 주요중점 추진과제
- 폐수방류량 절감
- 방류수 오염도 저감
- 유해물질관리체계 확립
- 역동적 환경보전활동 전개
- 4) 그간의 추진실적
- 「폐수 10% 줄이기」의견수렴 간담회 개최('94. 12. 2)
- 기업그룹·경실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계자 30명
- 「폐수 10% 줄이기」참여 요청 및 세부실천계획 시달('94. 12. 14)
- 직능·사회단체 13, 그룹 55, 시·도 및 환경관리청 등 22개 기관
- 기타 특기사항
- 1) '95년도 환경관리 모범업소지정(112개소)
- 배출업소의 자율적 환경관리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88년부터 운영
- 모범업체 신청공모제를 도입, 모범업소를 희망한 249개업소중 시·도지사 및 환경관리청장의 합동평가·추천을 받은 134개 사업장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2개 업소지정

- 모범업소혜택
- 정기·수시지도 점검면제
- (단, 민원발생, 주변지역, 오염도 증가 등의 경우 특별수시점검 실시)
- 방지시설설치자금 우선지원
- 당해업소 제품광고시 모범업소 지정표시 등
- 2) 단속공무원 및 민간유공자 표창실시(3회)
- 단속공무원 및 민간유공자의 사기양양과 효율적인 배출업소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표창 실시
- 인원 : 총 31명
- 단속공무원 : 23명(시·도 : 17명, 중앙단속반 및 환경관리청 : 6명)
- 환경관리공단 : 2명
- 민간 및 단체 : 6(민간 : 5명, 단체 1)
- 오염도 현황
- 수질분야
- 전국 공단배수로, 공장밀집지역 하류하천 등 주요 지점(총 39개 지점)의 '93, '94년도 BOD 오염도의 증감율(%)를 비교하면
- '93년도 보다 '94년에 오염도가 증가된 지점이 24개소로 공단지역의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15개소는 개선됨

공 단 명	'93	'94	증감율 %
오천공단	121.3	375.6	209.6
달성공단	10.7	20.3	89.7
신평·장림공단	134.3	223.3	66.3
↓			
원주공단	61.9	33.5	-45.9
양산공단	123.4	65.3	-47.1
정주공단	72.3	22.6	-68.7

공단천별 증감율을 비교해 보면 오천공단, 달성공단, 신평·장림공단 순으로 오염도가 악화된 반면, 정주공단, 양산공단, 원주공단순으로 오염도가 개선됨

공단천의 연평균 오염도(BODmg/l)가 일반적인 공단지역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 150을 초과하는 곳이 5곳, 150이하 100이상을 초과하는 곳이 8곳이나 되고 있어 원인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오천공단 : 375.6 신평·장림공단 : 223.3(유입수)
 반월공단3 : 216.9 서대구공단 : 212.6
 대구3공단 : 179.3

□ 대기분야

전국 공단지역 또는 공단인접지역(22개 지점) 대기 오염도(NO₂)의 '93, '94년도의 증감율(%)을 비교하면 '93년보다 '94년도에 개선된 지점이 5개소뿐으로 대기오염도가 악화되는 추세이며 강원도 학성동의 경우 73.3%나 악화됨

(NO₂, ppm)

측정지점	'93	'94	증감율 %
강원(학성동)	0.015	0.026	73.3
대구(노원동)	0.016	0.024	50
대전(대화동)	0.012	0.018	50
전남(중동)	0.012	0.018	50
↓			
전북(팔복동)	0.024	0.020	-16.6
서울(구로동)	0.032	0.021	-34.4

측정지점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서울 구로동, 전북 팔복동은 개선된 반면 강원 학성동, 대전 대화동, 전남 중동, 대구 노원동은 악화되고 있어 원인 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평가

□ 일반평가

단속건수와 위반건수를 비교하면 '93년도 대비 '94년도에는 지도·단속건수가 40.1% 증가한 반면 위반건수는 9.4%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 설날연휴 등 취약시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단속건수는 증가한 반면 동기간에는 행정절차 위반보다는 미처리방류 등 오염물질 배출상태에 중점을 두어 단속하고 동기간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업중인 관계로 위반율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배출허용기준초과는 4,963건으로 '93년도의 4,965건과 비슷하며, 부적정운영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714건으로 '93년의 613건보다 16.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오염저감을 위한 단속의 효율성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단속실적 평가

'94년도에는 연인원 230,355명을 투입하여 182,228개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11,752개 위반업소(6.4%)를 적발조치 하였음.

• 대기 : 연인원 74,648명을 투입, 54,456개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3,799개 위반업소(7.0%)를 적발·조치

환경관리인. 1995. 3

'93과 '94의 단속실적비교

기간	단속건수	위반건수	조치내역					
			개선명령	조정지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및기타	고발(병과)
'93	130,091	12,965	5,003	657	936	1,880	4,201	288 (3,638)
'94	182,228	11,752	4,897	821	830	1,227	3,733	244 (3,036)
증·감율(%)	40.1	△9.4	△2.1	25.0	△11.3	△34.7	11.1	△16.5

• 수질 : 연인원 155,707명을 투입, 127,772개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7,953개 위반업소(6.5%)를 적발·조치

○ '93년도 단속건수가 130,091건에서 '94년 단속건수가 182,228건으로 40.1% 증가하였으나 위반건수는 12,965건에서 11,752건으로 9.4% 감소하였으며 또한, 위반율도 10.0%에서 6.4%로 감소하였음.

'94년의 경우에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행정절차 위반보다 기존업소의 미처리 방류 등 오염물질 부적정 배출행위를 중점 단속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공휴일·야간·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많이 한 것도 위반율 감소의 원인이된 것으로 판단됨.

※ 중앙단속반과 비교

'94년 중앙단속반의 위반율은 13.6%로서 전국 6.4%에 비해 7.2%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앙단속반에서 적발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단속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율(%)
전국	182,288	11,752	6.4
중앙단속반	2,566	348	13.6

배출허용기준초과가 72%, 부적정운영이 15%로 전국의 배출허용기준초과 51%, 부적정운영 6%로 오염물질의 실질적 처리를 위한 단속면에서도 전국의 위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중앙단속반의 실적이 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오염사고 다발지역 등으로 문제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조치 계획

평가결과 통보 및 보도자료 제공

○ 평가결과를 시·도, 환경관리청에 통보(단속부

진 시·도에 대한 단속강화 촉구)

○ 동 평가내용을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제공(언론 평가유도)

각 시·도 및 환경관리청 지도과장 회의를 개최(2.22)하여 지도·점검철저 요청

○ 배출업소관리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격려 및 미진한 기관에 대하여 단속촉구

* 갈수기 및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 수질감시강화 등 수질감시체계 개선

○ '94년도 2회 이상 위반배출업소는 문제업소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 무허가 배출업소는 관리카드작성 및 담당공무원 지정관리

○ 효율적인 배출업소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배출업소 지도·단속공무원 포상

○ 지도·단속공무원 사기양양 및 격려차원의 환경부장관 표창

○ 30명(시·도 및 시·군·구 20명, 환경관리청 및 중앙단속반 10명)

• 항목별 상위 순위가 많은 기관에 표창인원수 우선 배려

오염도가 상층한 공단지역, 상수원 상류지역 등 문제지역,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실시

는 자에 대해 동 폐기물의 회수·처리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여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반환함으로써 폐기물의 사전적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92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나 회수처리율이 '92년 1.9%, '93년 7.8%, '94년 8.6%로 폐기물의 회수처리 유인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치금요율을 실 회수처리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되 품목별로 회수처리 목표율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품목은 인상하지 않는 등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우선 2000년까지는 실 회수처리비의 65%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의 예치금대상품목중 Life cycle이 길어서 재활용의 가치가 거의 없는 가전제품은 부담금대상품목으로 조정하되 지금까지 환경에 유해한 CFC물질이 함유된 가전제품이면서도 예치금·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냉장고를 추가하고 세제류 등에 사용되는 PET용기도 예치금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예치금 부과·반환시의 구비서류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계산단위변경 등 절차를 개선하고 미반환된 예치금은 예치금 대상품목의 회수재활용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경우와 회수만 하는 경우의 예치금 반환요율을 차등화하여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을 유도하며 기업의 미환수 예치금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줌으로써 비용처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소비자의 재활용품 회수촉진을 위해 유리병과 같이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소비자보증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하고 수입업자가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승인기관의 예치금납부여부확인 의무를 명문화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예치금제도가 개선될 경우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한 기업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부는 이를 위해 '95년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개정하여 '96.1.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폐기물예치금 대상 품목 확대

그동안 폐기물의 회수·처리 유인효과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96년부터는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현재의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예치금요율이 실제 회수처리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후 예치금 환불상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이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기피하고 있고, 미환수 예치금의 누적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를 제기하고 있어 환경부는 폐기물예치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95.2.24일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법령을 정비한 후 '96.1.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 또는 다량으로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